

No. 2013-42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10. 21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아베 총리 국회 연설 경제 최우선 확인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1 일본경제지표

□ 주간 현황지표

- 엔화환율 : 미국의 재정협약 타결 전망에 따른 엔화 매도세 우세로 약세
- 장기금리 : 미국의 재정협약 타결에 따른 세계적인 저금리 예상으로 하락세

구 분	10.14(월)	10.15(화)	10.16(수)	10.17(목)	10.18(금)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달러당)	-	98.48	98.55	98.80	98.10
엔화의 대원화 환율(100엔당)	1,089.18	1,086.59	1,086.92	1,078.75	1,085.85
닛케이평균주가(종가)	-	14,441.54	14,467.14	14,586.51	14,561.54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 연리%)	-	0.665	0.640	0.625	0.615

□ 주요 거시경제지표

- 2013년 9월 무역수지는 9.3천억엔 적자로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 * 對한국 무역수지는 1.9천억엔 흑자로 전월보다 흑자폭이 소폭 확대
- 2013년 8월 경상수지는 7개월 연속 흑자(1.6천억엔)를 기록했으나 흑자폭은 감소

구분	2012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실질GDP증가율(연율,%)	1.2(2.0)	4.1(P)			3.8(P)			-		
수 출(천억엔)	639(637)	48	53	63	58	58	61	60	58	60
수 입(천억엔)	721(707)	64	61	66	67	68	62	70	67	69
對한국 수출	49.7(49.1)	4.01	4.25	5.21	5.07	4.61	4.54	4.77	4.59	4.57
對한국 수입	32.8(32.4)	3.12	2.92	2.81	2.58	2.85	2.57	3.04	2.78	2.72
직접투자(억달러)	(1,223)	234			331			-		
對한국 투자	(40)	7.7			9.1			-		
소비자물가(전기비,%)	▲0.2(0.0)	▲0.3	0.1	0.3	0.3	0.2	0.0	0.1	-	-
실업율(%)	(4.4)	4.2	4.3	4.1	4.1	4.1	3.9	3.8	-	-
경상수지(천억엔)	42.9(47)	▲3.6	6.4	12.5	7.5	5.4	3.4	5.8	1.6	-
엔화 對미달러 환율	82.9(80.1)	89.2	93.2	94.8	97.7	101.0	97.4	99.7	97.9	99.2
환율 對원화(100엔)	(1,413)	1,197	1,166	1,161	1,148	1,100	1,165	1,130	1,142	1,095
외환준비고(기말, 천억달러)	12.5(12.7)	12.7	12.6	12.5	12.6	12.5	12.4	12.5	12.5	12.7
국채금리(10년, 연리%)	0.560	0.740	0.665	0.560	0.600	0.860	0.855	0.795	0.720	0.680

주1.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은 기간평균, 자료: 닛케이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3. (P)는 2차 속보치(개정치)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일본의 투자과소, 중국은 투자과대의 함정』 다이와종합연구소, 10월17일
 - *출처: http://www.dir.co.jp/research/report/japan/mlothers/20131016_007793.pdf
- 『쿨 재팬 전략의 개요와 논점 : Issue Brief』 일본국립국회도서관, 10월18일
 - *출처: http://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8321807_po_0804.pdf?contentNo=1

② 주간경제이슈 : 아베 총리 국회 연설_경제 최우선 확인

□ 아베 총리 국회연설

- 최대 현안이었던 소비세율 인상 결정에 이어, TPP 타결을 앞둔 시점에서 아베 총리의 국회연설이 주목
- 10월 15일 임시국회에서 아베총리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성장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재정재건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동시 달성하겠다고 강조
-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대책 추진과 TPP교섭 타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 표명

□ 디플레이션 탈출은 절반의 성공

- 디플레이션 탈출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3년간을 집중투자기간으로 설정하여 세제와 예산, 금융, 규제개혁 등 모든 정책을 총동원할 방침

□ 규제완화를 중시하는 성장전략

- 대담한 규제완화를 도입한 국가전략특구를 창설하여 2020년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세계 최첨단 비즈니스 도시를 조성
- 성장분야에 도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적으로 규제완화를 인정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도 신설

□ 공수 양면의 TPP 전략

- TPP교섭에서 일본이 공수 양면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아태지역의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에 공헌

□ 경제대책에 의한 선순환 경제 실현

-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 결정과 동시에, 경제대책을 실시하여 임금상승과 고용확대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계 및 노동계 대표들과의 연대를 강화

□ 대담한 사회보장제도 개혁

- 소비세 증세와 경제재생 추진으로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대담하게 개혁

□ 외교·안보·정치 분야

- 외교·안보는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평화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역할을 주장

- 외교·안보정책의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창설과 중장기 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책정기로 함
-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 등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
- 의원 정수 축소를 포함한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현재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 당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헌법 개정에는 국민투표 절차를 정비하고 국민적인 논의를 심화하면서 진전시키겠다고 함
- 개헌에 필요한 국민투표 대상을 18세 이상으로 확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
-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안보정책면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공명당을 배려하고,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색깔을 숨기려는 의도라고 평가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풍문피해라고 보고, 식품과 물에 대한 영향이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고 발언
- 후쿠시마 원전 폐로·오염수 대책 노력을 동경전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전면에서 나서서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

□ 평가

- 사회보장제도의 대담한 개혁은 사회보장비의 억제라는 고통을 수반하는 개혁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
- 성장전략의 기둥인 규제개혁은 의료 및 농업 등의 바위처럼 굳어 있는 이른바 암반규제로 규제관청과 업계단체, 족의원 등의 벽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임
- 아베 총리도 경기회복에 대해 아직 국민 모두가 체감하지 못하는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기업수익의 증가가 임금상승과 고용증대로 이어질지 여부가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좌우할 것임
- 외교 분야에서는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음
- 한·중 정상은 모두 자국 내 여론을 의식하여 양보하지 않고 있지만 개선시키려는 의지는 있어 보이므로 아베 총리가 전향적인 메시지가 전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닛케이신문에서 평가
-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행사 용인과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여당 내부의 마찰을 해소시키기 위해 부심하는 모습
- 그러나 연설문의 적극적인 평화주의라는 단어에 집단적 자위권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적 해석의 재검토가 포함되어 있다는 인식임
- 이와 관련하여, 장기정권을 겨냥하여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여당 내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닛케이신문은 해석

③ 경제정책동향

□ 외화준비고의 국가 관리체제 손질, 일부를 민간에 위탁

- 일본정부가 약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외화준비 운용체제를 재검토할 계획
 - 현재 외화준비 전액을 정부가 운용하는 체제를 바꾸어 민간 운용회사 및 신탁은행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기로 함
 - 민간의 노하우를 도입하여 운용에 효율성을 기할 목적으로, 필요한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14년부터 실시할 계획
- 민간에 위탁하는 규모는 당분간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수 조엔 규모의 투자 사업이 창출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정부가 미국 국채와 정부기관채 등 안정성이 높은 채권을 중심으로 한 운용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
 - 민간 위탁 규모도 시장에 대한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중을 기할 방침
- 일본 정부는 10월 15일 임시국회에 특별회계관련법안을 제출하는데, 그 중 하나가 외국환자금특별회계의 재검토
 - 지금까지는 외화준비고 전액을 일본정부가 운용하고 약 130억 엔에 이르는 자산의 90%를 신용등급이 높고 유동성도 높은 채권에 배분해왔음
 - 그러나 정부 내 한정된 인원으로 운용 일손이 부족하여 운용체제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
- 개정안에 의하면 지금까지 금지된 민간운용회사와 투자자문회사와의 투자일임계약 외에 신탁은행과의 신탁계약을 해금
 - 투자대상은 종래대로 국채와 정부기관채 등 안정성이 높은 채권으로 하되, 외화준비 운용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
- 위탁처에 대한 수수료 비용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민간의 노하우를 도입함으로써 금리동향에 따라 정교한 매매 및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일본정부가 재검토를 하게 된 배경은 외화준비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과거에 엔고를 방어하기 위해 반복해 왔던 일본정부·일본은행의 엔매도·달러매입 개입에 의해 일본의 외화준비고가 과거 10년간 2배 이상 증가
 - 그 결과 일본도 중국에 이어 세계 제 2위의 외환보유국으로 등장함에 따라 외화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외환보유대국을 중심으로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사례는 많음

- 관련법 개정 후에는 은행에 한정되고 있는 보유채권의 대출처를 증권회사에 까지 확대할 방침인데, 이에 따라 대출수수료 증가를 통한 운용수입 확대가 예상
- 외국환특별회계의 슬림화도 진전될 전망
 - 현재는 엔매도·달러매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했던 정부단기증권의 일정액을 적립해야만 하는 점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적립제도를 폐지하고 외화준비고의 운용수입을 정부단기증권의 상환에 충당하기 쉽도록 하여 채무 감축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임

□ 일본의 바이오분야 규격이 국제규격으로 채택

- 유전자변환 작물의 선별 등에 사용되는 검사용품인 바이오칩 분야에서, 일본이 제안한 성능평가방법이 이르면 10월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새로운 규격으로서 인정될 예정
- 바이오 분야에서 일본이 제안한 규격이 인정되기는 처음으로, 일본의 바이오칩 관련 시장이 확대될 전망
- 경제산업성과 관련 기업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바이오칩컨소시엄」등이 2008년 규격책정을 ISO에 제안한 이후 최근 승인위원회 멤버인 프랑스, 인도 등 11개국의 찬성을 얻음
- 새로운 규격은 바이오칩이 측정할 수 있는 액체의 농도 등을 상세하게 규정 한 것으로, 종래는 해외기업을 포함하여 각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자사제품을 평가하고 있었음
- 도시바와 도레이 등은 농도가 낮아도 검출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어, 일본기업들의 해외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
- 바이오칩의 세계시장규모는 약 800억 엔으로, 현재는 연구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유전자변환 작물의 검출 등 산업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

4 일본기업동향

□ 경기회복 조짐 확산, 기업의 생산·투자 확대

- 일본의 경기회복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상승이 소비증가로 나타난데 이어, 엔저로 수익이 증가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설비투자에 나서기 시작
 - 내년 4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가수요도 본격화되고 내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세 이후 향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임금인상과 대형 투자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대기업들도 있음
- 리먼 쇼크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경기는 엔저로 상품수출이 먼저 증가하는 수출주도였는데, 이번에는 금융완화에 의한 엔저·고주가를 발판으로 개인소비가 먼저 증가하고 기업이 생산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닛케이신문이 진단
- 노무라증권에 따르면, 주요 상장기업 332개사의 경상이익은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1엔 하락하는 경우 2,240엔 증가
 - 저가 중국제품의 수입이 감소한 철강과 제지 분야의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며, 철강 3사의 고로가동율은 80%에서 90%가까운 수준으로 상승
- 9월 일본은행의 「단칸(短観)」에 의하면 2013년 10월~2014년 3월 기간 중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6월 조사에 비하여 4.2% 상향수정
 - 상향수정 폭은 대기업보다도 중견·중소기업 쪽이 큰데, 대기업의 영업실적 호전이 거래처에도 영향을 끼친데 다, 금융완화로 중소기업들도 대출받기가 쉬워진 점도 하나의 요인
 -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시게루공업(주)은 주요 거래처인 후지중공업의 증산에 대응하여, 약 6억 엔을 들여 생산설비를 교체
 - 반도체장치의 부품을 제조하는 히비키정기(주)는 8억 5천만 엔을 들여 공장을 신설, 항공기부품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반도체 관련 제품은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 수출도 엔저효과로 조금씩 회복, 수출수량이 7월에 1년 2개월 만에 전년 수준을 상회
 - 미국은 재정문제를 둘러싼 의회대립으로 정부기관이 일부 폐쇄되는 등 경기후퇴 리스크, 그리고 신흥국에 대해서는 경기감축에 따른 리스크 등 수출리스크가 잠재되어 있음
- 내수 역시 당분간 호조를 보이겠지만, 내년 봄에는 소비세 증세로 침체될 전망
 - 만일 수출 회복이 기대수준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일본경제가 다시 주저앉을 우려가 있다는 것

□ 소프트뱅크, 스마트폰 관련 업체 2개사 매수

- 소프트뱅크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 확보를 위해 해외기업을 잇따라 매수
 - 통신회사에 단말기 등을 판매하는 미국 브라이트스타를 매수하기 위한 최종 조정에 들어가는 외에, 세계적인 스마트게임 업체인 핀란드 슈퍼셀도 매수
 - 매수가액은 양사 합쳐 2,500억엔 이상,
 - 조사기관인 시드플래닝에 의하면, 스마트폰 보급대수는 2012년 약 15.5억대에서 2013년에는 22억대로 PC를 상회한데 이어 앞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2017년에는 43억대에 달할 전망
 - 소프트뱅크는 투자펀드 등으로부터 브라이트스타의 주식을 50%이상 취득, 최종적으로는 약 70%까지 늘릴 계획
 - 취득가액은 1,000억 엔을 약간 웃돌 것으로 보여 지며 금년 중 매수를 완료할 방침
 - 브라이트스타는 2012년 매출액이 약 6,200억 달러로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신흥국의 통신회사에 대신하여 대량구매로 단말기의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
 - 다양한 판로를 가진 동사의 매수로 소프트뱅크는 아시아 등에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폰 수요를 확보하는 동시에, 소프트뱅크그룹으로서도 대량조달로 메이커에 대한 가격교섭력을 높여 미·일의 휴대전화 서비스에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구입가격을 하락시킬 방침
 - 슈퍼셀의 매수와 관련해서는, 11월 초까지 동사 주주인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 주식의 절반이상을 취득할 예정
 - 소프트뱅크가 80%, 스마트폰 자회사인 강호온라인엔터프라이스가 20%를 출자하는 특별목적회사를 통하여 매수
 - 소프트뱅크는 휴대전화업체 미국 내 서열 3위인 스포린트 매수에 의해 미·일 합쳐 약 1억 건의 통신서비스를 구축했는데, 앞으로는 통신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

5 한국관련워치

□ 넷케이신문 사설, 「한일관계 방치해도 좋은가」

- 넷케이신문이 10월 12일자 사설에서 「한일관계 방치해도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한일관계를 다룸
- 한·일 정상회담이 좀처럼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한국 측에서 찾고 있음
- 특히 한·일 모두 민주주의 국가로 상호 이해의 여지가 충분이 있을 터인데, 아무리 역사문제의 골이 깊다고 하나 냉각된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 것인가 하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
 -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상호방문보다 장벽이 낮은 국제회의를 이용하여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첫 번째 회담을 모색해왔으나 G20, APEC회의, ASEAN 관련 회의에서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한·일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국제회의는 당분간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양국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정상회담을 열지 못하는 이상 사태가 예상된다는 것
- 아베 총리는 브루나이에서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인접국가로, 문제가 있을수록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
- 회담에 부정적인 것은 한국 측이라는 것
 - 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국의 헤켈 국방장관에게 역사에 역행한 발언을 하는 일본의 지도부 탓으로 신뢰를 쌓을 수 없다고 밝힘
 -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던 올 봄 아베 총리의 발언이나,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을 문제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
 - 외교는 신뢰가 중요하다는 하는 박 대통령의 입장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정상간 허심탄회한 대화 없이는 신뢰는 쌓을 수 없다고 넷케이신문은 보도
 - 역사문제를 포함하여 영국 정상이 본심을 털어놓고 타개책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
 - 양국 정상이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상호 국민감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것
- 한국과 일본은 역사문제에 그치지 않고 현안이 산적해있으며, 그중 하나로 한일 FTA교섭이 오랫동안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TPP 참가를 검토하

고 있음을 지적

- 닛케이신문은 이러한 분야에서 한·일이 협력하는 길도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일은 2015년에 국교정상화 50년을 맞게 되는 바, 관계를 재구축하도록 양국 정상에 미래를 향한 관계 개선에도 시선을 두었으면 한다고 보도

□ 가와사키중공업, LNG선 개발로 한국기업과의 수주경쟁에 대응

- 가와사키중공업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액화천연가스를 효율적으로 운반하는 LNG선을 개발, 2017년에 실용화할 예정이라고 닛케이신문이 보도
 - 선체의 크기는 그대로 두고 LNG탱크만 개량함으로써, 종래 운반선보다 적재량이 10% 늘어남
 - 2017년 미국산 셰일가스의 수입개시에 맞추어 상사와 전력회사에 판매를 강화, 수주에서 크게 앞선 한국기업을 추격하려는 의도
- 새로운 운반선은 적재량이 10입방미터로 선체의 크기가 거의 같은 종래 운반선보다도 적재량이 약 10% 많은 반면, 운반선의 폭은 49미터를 유지함으로써 파나마 운하를 운항할 수 있는 것이 특징
- LNG선의 가격은 1척당 대형 석유탱커 2척분인 200억 엔 정도로 수익성이 높는데, 세계시장 수주경쟁에서는 한국기업이 앞서고 있음
- 가와사키가 한국기업이 건조할 수 없는 신형 운반선을 개발함으로써 수주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특히 고부가가치 운반선 개발로 가격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차지
- 가와사키 등 일본 조선업체는 2014년 건조하는 선박이 제로가 되는 이른바 「2014년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으나, 최근 엔저로 건조부문의 채산성이 회복됨에 따라, 미래성장을 목표로 한 신기술의 실용화 추진 여력이 생김